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3면

탈북 어민 강제 복송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위선
16면

세계경제 전망
8~10면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11~13면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1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일반적 위기의 양상들
4~7면

탈북어민 강제복송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도권개권이다

관련 기사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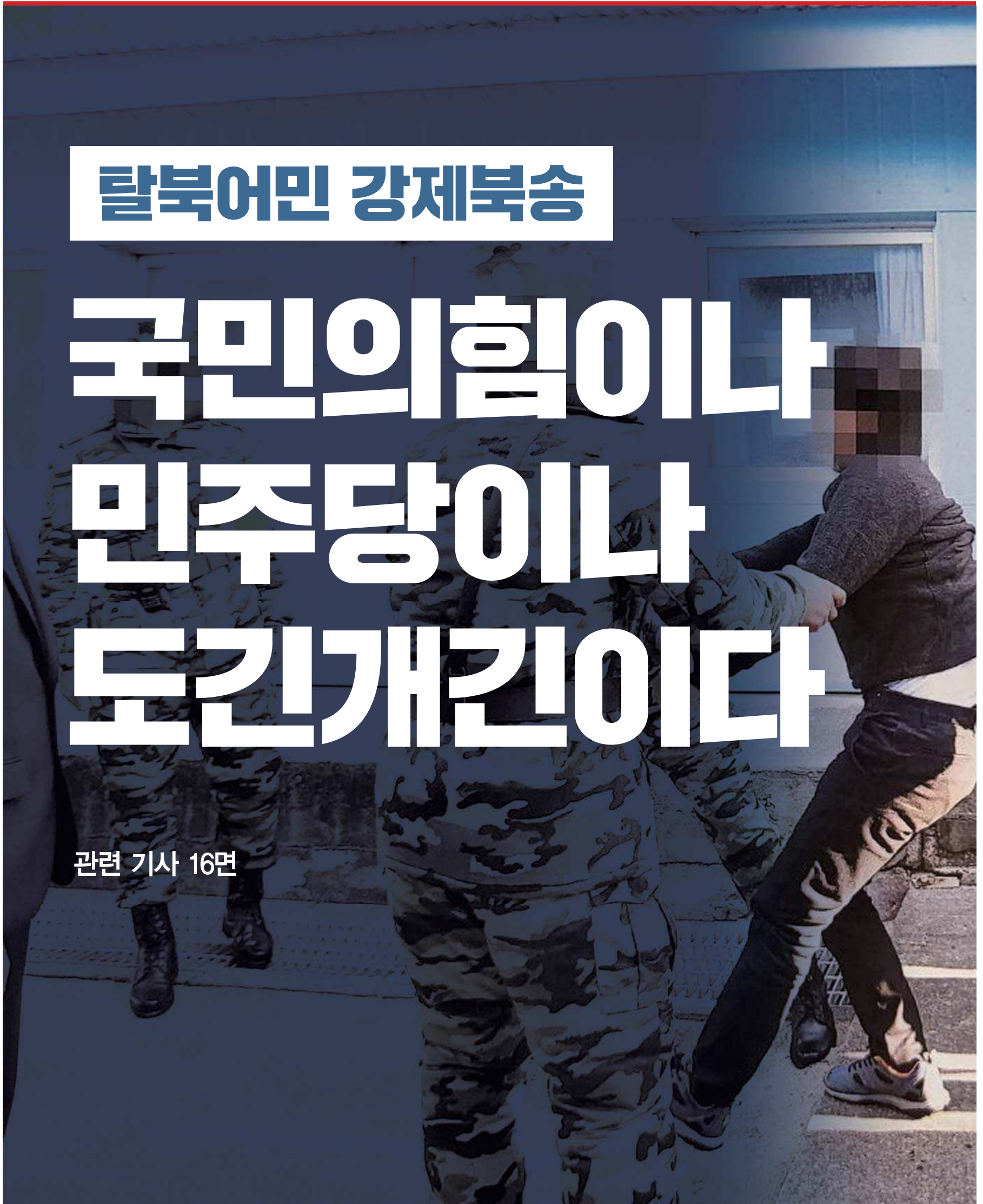




사진 출처: 대통령실

대우조선 불법 엄단? 정권 초부터 노동운동에 정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배자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는 압력도 함께 받고 있다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일부 자본들은 고환율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나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는데도 환율은 더 올라서, 고금리·고물가가 함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결정한 또 다른 목적은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되고,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6월 말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나 최근의 물가 양등은 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 국면 종료 후 경제 활동을 신속히 '정상화'하려다 생긴 공급 차질, 가뭄 등 기후 위기가 초래한 식량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가중시킨 에너지·식량 공급 부족 등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금 억제 방침은 물가 상승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비

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깎았다. 대기업 한전의 적자 운운하며 한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 버렸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 등에 동참하면서 자국민 생계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경기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은 물가 억제를 위해 고의적인 경제 침체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미국·중국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지면,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상반기에 한국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66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대중국 무역도 28년 만에 적자 기록).

이런 상황에서 임금 인상으로 이윤이 줄까 봐 기업주들은 노심초사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다. 지금은 대우조선 사내하청지회 파업에 경찰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은 집권 전부터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걸맞은 경제 관료들을 중용했다. 정부는 개입과 규제를 줄여 더 많은 결정권을 기업들에 주겠다고 한

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를 확대하려 하고, 전기·가스 요금을 올렸고, 기업과 부유층 감세 계획을 밝혔다.

정부 적자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부자 감세로 재정 수입을 줄이는 것은 결국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정부 지출의 대폭 감소를 수반할 것이다. 장차 국민연금이 주된 표적의 하나가 될 듯하다.

국가의 주먹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것과 고물가 상황을 시장에 맡기는 것, 이는 모두 대중의 생활수준을 하락케 하는 공격이다. 정권 초부터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훨씬 더 많아진 이유다.

부정적 시각이 느는 것을 의식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도록 압박하고, '영끌족' 부채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지만, 현 위기 정도에 견주면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다. 6월 말 <동아일보>는 사실에서 이 딜레마를 이렇게 지적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 여당은 지금 고물가·고금리 [문제를] … 시장에만 맡겨두자니 '정부가 손을 뗐다'는 비판

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간 주도 경제'를 하겠다는 정부가 역대 정부와 똑같은 관치(官治)로 기업 손목을 비트는 것은 스스로 세운 국정 원칙을 허무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주들에게 뻥뻥한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껏해야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빨리 체결하고, 기업들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물론 기업주들은 정부의 보이는 주먹에도 기댄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 등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재계의 요청에 응해 7월 18일 대우조선 사내하청 파업에 대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도록 긴급 지시했다. 회의 후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옆에 세우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찰 투입 초읽기라는 보도들이 나온다.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퍼센트대로 급락하는 등 정치적 취약성을 드러낸 신임 정부에게 경찰력 투입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특히, 정권 초부터 노동운동에 정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배자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는 압력도 함께 받고 있다.

김문성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압박 말라

박설

어제(7월 18일)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 문제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 점거농성을 지속하면 엄중 대응하겠다.”

대우조선 하청노조(금속노조 거룡고지회)는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7월 19일 현재 48일째 파업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2년여간은 조선업 경기가 회복됐지만, 사용자 측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바빴다. 노조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하청노조 간부·조합원 7명이 1도크(dock,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에서 고공 농성과 '0.3평 철제 감옥' 농성을 하고 있다. 다른 파업 조합원 150여 명은 공장 안팎에서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 사업장의 경제적 투쟁에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은 이 투쟁이 현 상황의 논리로 정치화됐음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끈덕지게 싸우면서 이목이 쏠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달려들었다. 이달 초순 경부터 수천 명 규모의 연대 집회가 몇 차례 열리고,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파업 지지 모금도 됐다.

최근 원하청 노사 4자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강경 진압을 시사하며, 파업 노동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을 낮추는 등 후퇴하라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농성장에서 끌려 나올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일부 민주노총 활동가들에 따르면, 하청노조 지도부는 최근 임금 30퍼센트 인상에서 10퍼센트 인상으로 요구 수준을 낮춰야 했다고 한다. 미확인 보도이지만 말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경찰력 투입을 지시하지는 못했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20퍼센트 포인트가량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과 거센 정치적 반발을 부를 일을 단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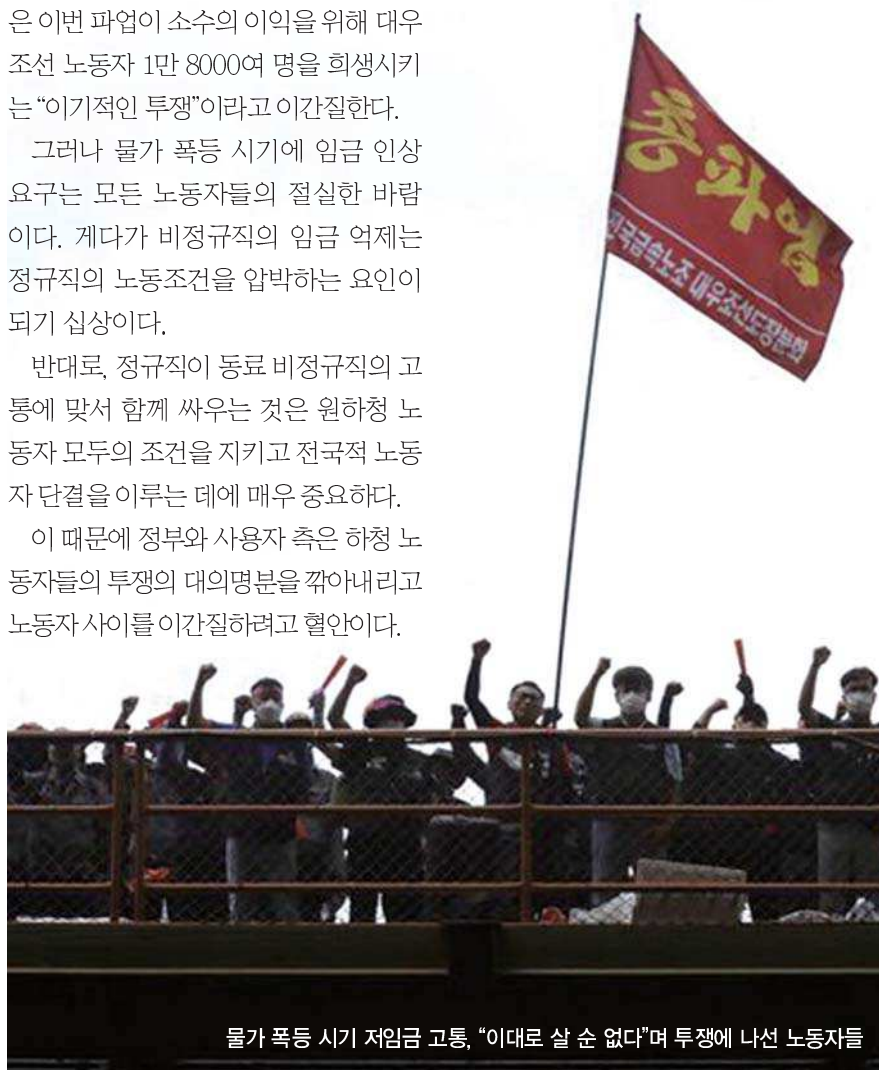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 사용자 측

은 이번 파업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우조선 노동자 1만 8000여 명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투쟁”이라고 이간질한다.

그러나 물가 폭등 시기에 임금 인상 요구는 모든 노동자들의 절실한 바람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임금 억제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십상이다.

반대로, 정규직이 동료 비정규직의 고통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은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조건을 지키고 전국적 노동자 단결을 이루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 측은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의 대의명분을 깎아내리고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혈안이다.



물가 폭등 시기 저임금 고통, “이대로 살 순 없다”며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

조선일보 제공

정당들이 개입할 만큼 정치적이 되다

좌파 정당들이 하청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좋은 일이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기본소득당은 파업 지지 입장을 밝히고 앞다퉈 대우조선 현장을 찾았다.

그런데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국회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

하고, 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성명을 내어 신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지지를 건설하고 더 넓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하는 것이 중재에 나서는 것보다 좌파 정당 본령에 더 걸맞을 텐데 말이다.

게다가 중재·타협에 무게를 싣게 되면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일관되게 옹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파업을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정부와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자면서도) 하청노조에게 도크 농성 해제를 요구했다.

우파적 노동자들에게 단호해야 한다

한편, 대우조선 사용자 측은 직장·반장(현장책임자연합회)과 심지어 직원들을 동원해 파업을 공격해 왔다. 정규직노조 내 우파 서클 민노협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7월 8일 사용자 측의 지원 속에 공장 앞 서문에서 열린 이들의 ‘파업 중단 촉구’ 대규모 시위는 그 절정이었다. 집회 후 참가자 수백 명이 공장 안 파업 노동자들의 농성장 쪽으로 몰려가 1도크 인근에 있던 천막과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 여성 노동자가 열린 생수병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 명이 공장의 다른 쪽 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이런 만행이 벌어졌다. 이를 대비한 방어 행동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 뒤늦게야 소식을 접한 집회 참가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정규직 노조 내 우파조직은 이 참에 금속노조를 탈퇴하자며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지난해 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때와 많이 닮았다. 당시에 도 정규직노조 집행부는 우파적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반대 행동을 보아 넘겼다.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의 정상현 집행부는 “하청지회의 극단적 투쟁[이]

모두의 공멸을 부른다”며 하청노조에 온건화를 압박해 왔다. 선박 제조에 차질을 주는 도크 점거를 해제하고 산업은행 앞으로 투쟁 거점을 옮기라고 요구했다. 이는 오히려 우파의 기를 살려주는 구실을 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흔히 그렇듯, 노조 관료들이 평지풍파 일으키기를 유대감에서 삼간 결과일 것이다.

정규직노조 내 민주파(좌파) 제조직도 집행부와 민주노총·금속노조 지도부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보다 ‘안정적 교섭’ 성사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점거 농성 강화와 방어를 중심 삼아야

최근엔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의당 등이 산업은행 앞으로 집회와 농성을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실소유주(‘진짜 사장’)인 산업은행을 향해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필요한 일이겠지만, 일터 현장 점거 상황에서 중심 축을 이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섭 성사로 노조를 인정받으려면 기층 하청 노동자들의 바람, 즉 임금 대폭 인상을 쟁취할 진지한 각오와 세력 과시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 농장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이를 방어하는 광범한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 측을 강하게 압박해 실제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결과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가 체제 전체의 다중적 위기의 시작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광범하고 다중적인 위기를 응축·심화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중 위기’란 여러 위기가 겹쳐 있다는 뜻이다. 먼저, 경제의 침체·불안정이 있다. 경제의 침체·불안정은 특히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만,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주요 도전자들, 특히 중국에게도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 혼란도 있다. 그리고 기후 혼란과 여러 면에서 긴밀히 연관된 팬데믹 위기도 있다. 물론 제국주의(간) 갈등 심화도 있다.

그리고 지금 생계비 위기가 있다. 생계비 위기는 지난 몇 달 새 치솟은 물가 상승률의 효과이다.

이제는 많은 친자본주의 논평가들도 이런 다중 위기의 존재를 인정한다. 예컨대 명민한 자유주의 경제사가 애덤 투즈는 팬데믹, 금융 위기 등등을 일컬어 ‘복합 위기’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서로 다른 위기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들의 근원이 모두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점차 붕괴하는 데에 있음(억측은 아닌 듯하다)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붕괴란 외장창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시스템의 재생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점에서 생계비 위기는 그런 붕괴의 최신 국면을 매우 뚜렷이 보여 준다. 생계비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원자재, 컴퓨터 칩 같은 제조업 생산 부품, 식량·에너지 공급 등 체제의 수익성 있는 작동에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의 표현이다. 붕괴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두 세기 동안 산업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였던 것, 즉 이언 앵거스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화석연료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 파괴를 추동하는 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화석연료 자본주의란 체제가 이런 저런 화석연료를 소비함으로써 자연의 동역학과 스스로 유리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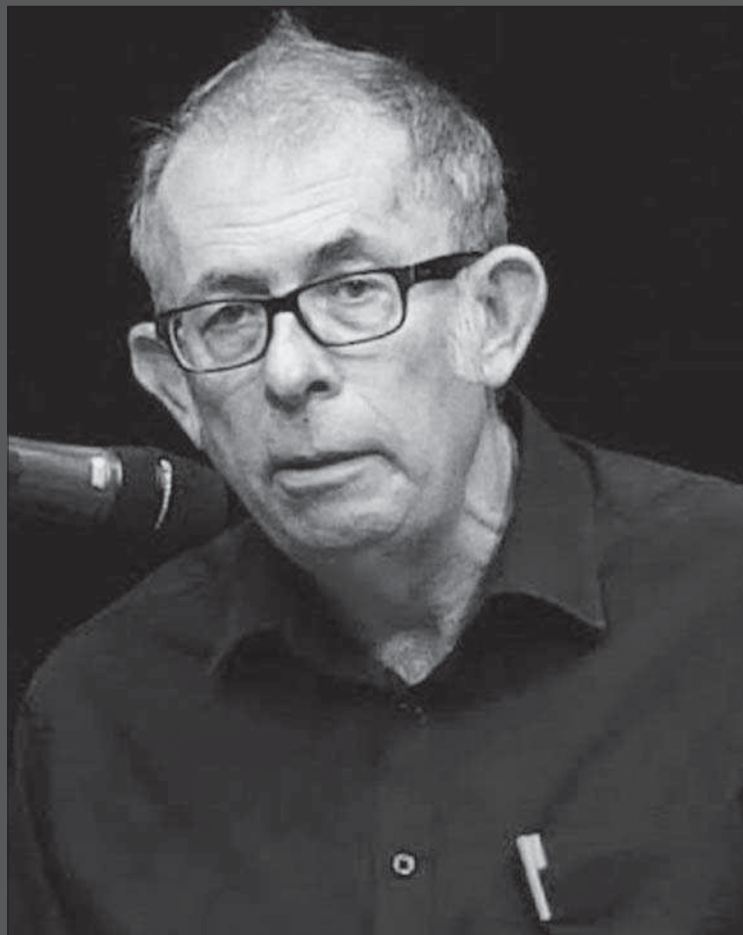


사진 출처: SWP TV (유튜브)

알렉스 캘리니코스

일반적 위기의 양상들

다음은 7월 14일 국제사회주의경향(ST) 토론회에서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한 발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역자가 덧붙인 것이다.

식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존재했지만, 점점 파괴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팬데믹은 그런 과정의 한 사례다. 롬 웰러스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팬데믹의 기원을 밝힌 연구들을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그런데 생계비 위기를 살펴보면, 화석연료 자본주의가 겪는 곤경의 증대와 그 근원이 같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를 거치며 심해진 것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진정한 배경은 세계경제의 회복이다. 팬데믹과 2020년 초 1차 봉쇄로 촉발된 급격한 침체에서 경기가 회복하면서 천연가스를 두고 경쟁이 심해졌다.

왜 천연가스인가? 자본주의 정부들과 기업들은 점점 천연가스를 가고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 즉, 천연가스는 예컨대 석탄에 견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적기 때문에 환경을 덜 파괴하는 연료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세인 지금 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등했다. 바로 이것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더 올랐다. 서방이 러시아에

생계비 위기는 다중적 위기가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의 조건에 직접적으로 매우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노동계급 행동이 벌어질 여지가 생기는 특별한 지점이다.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하고 러시아는 그런 의존에서 득을 보려 하기 (대체로 꽤나 득을 볼 수 있었다)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 식량 공급망 교란의 직접·간접적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화석연료 자본주의의 자연 파괴가 생계비 급등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현재 상당히 강하다. 그런 것은, 지금 호주 시드니 인근 지역 식물들의 [기후 변화로 인한] 흉작과 식생 변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남부 유럽의 사례도 있는데, 이탈리아 북부의 포 계곡의 가뭄이 심각하다. 농업 생산성이 매우 높은 이 지역의 가뭄이 심해지면 식량 위기와 식품 가격 상승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일반적 위기의 서로 다른 양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정치적 함의라는 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우리 국제사회주의경향(IST)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이를 (예컨대) 지난해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간에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 밖에도 권력층의 해결책은 공허하고 파산했음을 폭로하는 다른 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올가을 이집트에서는 COP27이 열릴 예정인데, 내 발제가 끝나고 COP27 대응 관련 특별 발언이 있을 것이다.[이 특별 발언은 본지 지난호에 실린 ‘COP27 이집트 회의 개최 반대 이집트 활동가 호소문’에 포함돼 있다.]

권력층의 해결책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특기할 만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만) 심화시킨 에너지 위기의 영향 중 하나는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 파괴 심화를 막는 일에서 심각하게 뒷걸음질했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환경을 파괴한 트럼프의 후임으로 당선해 친환경

▶ 5면으로 이어짐

▶ 4면에서 이어짐

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석유 증산을 호소하고 있다. 바이든은 미국에서도 프래킹* 방식으로 석유를 더 많이 시추하려 한다. 바이든이 화석연료 증산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석유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현 정부가 파탄 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다. 예컨대 [녹색당이 연정에 참가하는] 독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여럿을 재가동하려 하고 있다.

생계비 위기

위기의 여러 양상 중 생계비 위기를 특히 강조하고 싶다. 생계비 위기는 다중 위기가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의 조건에 직접적으로 매우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생계비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난주에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만큼의 식품을 이번 주에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노동계급 행동이 벌어질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과 특히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은 예외인데, 이들은 늘 그렇듯 혼란에 빠져 있다) 임금-물가 악순환의 위험을 들먹이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 때문에 다시 물가가 올라 악순환이 겹잡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 말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이윤-물가 악순환이다. 즉, 지금 대규모로 벌어



사진 출처: about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이탈리아 북부의 포 계곡. 이 가뭄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고 있는 일은 둘 중 하나다. 첫째,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 자기 이윤을 지키려고 하는 것. 둘째, 기업들이 현 상황과, 이윤을 늘리려고 자신들이 부추긴 물자 부족을 이용해 득을 보려 하는 것. 이를 자세히 보여 주는 연구들이 여럿 있다.

즉, 생계비 위기의 진정한 의미는 자본가 계급이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 대중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문에 자본가 계급은 정치적인 면에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스리랑카 정권이 극적으로 붕괴한 것이다. 라자팍사 형제가 세우고 이끈 이 정권은 타밀족 분리주의자들과의 내전을 매우 잔혹하게 끝내고, 스리랑카를 남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자리 잡게 한 듯했다. 그 시기 스리랑카는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만에 정권은 완전히 파탄 났다. 사람들이 밥 지을 연료도 구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생계비 위기가 결정적 이유였다. 이 때문에 몇 주 만에 대규모 반란이 분출해, 시위대가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가 대통령궁을 점거하고 대통령 일가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대통령은 재빨리 사임하고 몰디브로 줄행랑을 쳤다.

내 생각에, 스리랑카 항쟁은 세계 곳곳에서 분출할 항쟁과 정치적 격동의 첫 사례일 뿐이다. 그리고 생계비 위기의 파장은 특히 남반구[빈국]에서 매우 심각하다.

스리랑카보다 수위가 낮고 덜 극적인 정치 위기도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정부는 붕괴 위기다. 드라기 정부가 생계비 위기에 성실하

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오성운동[이탈리아의 우파적 포퓰리즘 정당]이 연정에서 빠지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계급의 집단적 대응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미국에서 파업 물결이 고조되고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난다.

영국 철도 파업도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 파업에는 매우 취약한 보수당 정부가 코로나19 봉쇄가 한창일 때 취했던 몇몇 비상 조치를 거둬들이려 한 것 등 구체적으로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활수준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대규모 행동에 나선 첫 번째 노동자 집단이 철도 노동자들이 됐다. 영국 철도 노동자들은 이미 사흘 파업을 벌였고, 또다시 7월 27일에 하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파업에는 다른 부문 노동조합들도 동참할 것이다.

생계비 위기가 더 높은 수위의 노동계급 행동이 벌어질 조건을 조성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위험한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간) 충돌이 벌어지고, 핵전쟁의 위험 등이 있는 상황에서 반전 운동이 너무 취약하다는 까다로운 문제에 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직접적 형태의 평화 운동으로 전쟁에 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 6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about

전 세계 9명 중 1명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 용어설명

프래킹

수압파쇄법이라고도 한다. 천연가스·석유 등을 채취하려고 땅속에 고압의 액체를 분사해서 광석을 파쇄하는 것. 대규모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



스리랑카의 위기는 생계비로 인한 정치 위기가 가장 멀리 나아간 사례의 하나다. 7월 9일 스리랑카 대통령궁 앞에 몰려든 시위대

▶ 9면에서 이어짐

1차세계대전 때에도 평화 운동이 있었지만 평화 운동이 그 전쟁을 끝냈던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의 파장으로 직접 타격을 받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일으킨 파업과 사병 반란이 전쟁을 끝냈다. 전쟁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만으로 전쟁을 끝냈던 것이 아니다.

이런 잠재력은 매우 중요하다. 혁명가들과 급진 좌파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좌우 양극화 과정이 중단됐다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념에 어긋나는 언행을 무심결에 또는 부지불식간에 하지 말자는 뜻.]

그런 양극화의 가장 뚜렷한 사례는 프랑스 선거다. 멜랑송이 프랑스에서 이런저런 단체들(주로 좌파적 개혁주의자들)을 결집시켜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의석을 톡톡히 챙긴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7년 선거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마린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이다.

프랑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기존 자본주의 정당 체제가 파탄 났다는 것이다. 그 폐허 위에 마크롱과 르펜 사이에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극우의 주류화라고 불리는 현상도 있다. 주류화란 인물의 부상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지배적 정당 체제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어떤 점에서 이는 미국에서 극단적 형태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6일 미국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 문제를 놓고 진행 중인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난입을 실제로 조직한 ‘오스 키퍼스’,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극우 단체들과 얼마나 긴밀히 조율했는지 드러나고 있다.

그날의 난입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부지하려는 목적에서 벌어진 시도였고 상호작용이었다. 그 시도가 실패해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부지하지 못했지만, 그는 극우 판사 세 명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해 연방대법원을 바꿔 놓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우 우파적인 연

방대법원은 이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내 생각에 미국 극우의 진정한 계획은 1960년대의 흑인 평등권 운동, 여성 운동 등 여러 운동이 성취한 개혁 일체를 되돌리는 것이다. 여전히 최강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 전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미국보다 규모가 훨씬 작지만,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실각과 후임 총리직을 다투는 경선은, 존슨 대표 시절을 거치며 극우 사상이 보수당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운운하는 극우 담론이 현재 보수당에서 주류가 돼 있다. 그런데 이 담론의 실제 의미가 반

유대주의임을 생각하면 이런 사태 전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생계비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은 극우에 맞서는 데에도 훨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조건, 각자 조직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 개입 역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를 결합시켜야 한다.

먼저, 생계비 위기에 맞선 전투적 저항을 건설하는 데에 일조할 기회가 생기면 무엇이든 붙잡으려 애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잘 조직돼 있고 전투적이고 사기 높은 노동계급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제국주의, 인종차별, 여성·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탄탄한 정치적 입장과 결합·연결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두 방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노동계급에게는 자신들이 당하는 착취와 물질적 압력에 맞설 잠재력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해방시킬 투쟁을 이끌 잠재력도 있다는 데서 나온다.

현 상황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심대한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환은 계급 정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명심하고 조직해야 할 일이다.

▶ 7면으로 이어짐



프랑스의 파시스트 르펜은 생계비 위기를 이용해 대선에서 상당한 성적을 거뒀다

▶ 6면에서 이어짐

토론 요약

아래는 발제 후 진행된 토론들을 캘리니코스가 요약·정리한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특히 기후 위기가 그렇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2018~2019년 ‘멸종 반란’ 운동이 분출할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진행되는 환경 파괴 과정과 그 예상 궤적을 탐구했던 기억이 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나는 정말이지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훨씬 무시무시하다. ‘미래를 앞질러 더 빨리 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미래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20세기 초반과 유사성이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시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대불황의 시대였고, 지금은 제국주의 경쟁과 경제 위기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요소는 화석연료 자본주의에 의한 자연 파괴다. 그리고 이것은 마르크스가 ‘신진대사 균열’이라고 부른 것, 즉 인류와 자연과 자본주의의 경쟁적 축적 과정 전체 사이에 벌어진 균열과 유기적·본질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다.

이는 기후 정치, 기후 정의가 우리의 말과 실천 모두에 깊이 뿌리내려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석유·가스 노동자들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관한 중요한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화석연료 산업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생계비 위기가 환경 파괴 과정과 어떻게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도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 위기는 핵심적 문제다.

생계비 위기

우익이 생계비 위기를 이용해 득을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이 4월 대선과 6월 총선에서 그토록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 하나는 르펜이 생계비 문제에 집요하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바로 그 쟁점 때문에 르펜은 수많은 유권자들에 가닿을 수 있었다.

극우는 생계비 위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쟁점은 명료한 노동계급적 정치를 위한 공간을 세우고 늘릴 수 있는 쟁점이다. 이는 실질적인 기회이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는 중요한 상황 변화다.

분명 우리는 이에 관해 더 분석하고 토론해야 한다. 우리 사이의 견해 차이



체제의 복합적 위기들 중에서도 생계비 위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직접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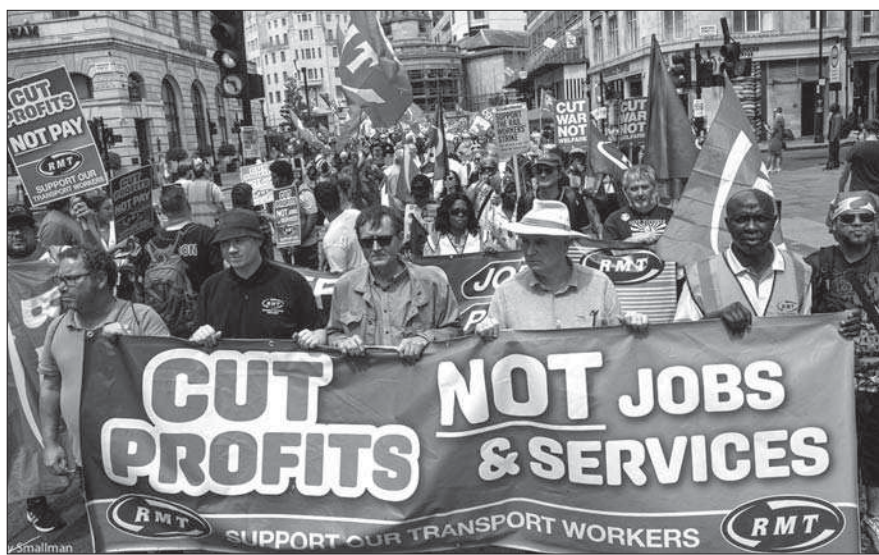
때문에도 그렇다. 그리스의 파노스 동지가 오늘날 임금 투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때 아일랜드의 존 몰리뉴 동지가 이견을 표했다.

[몰리뉴의 주장처럼] 노동계급 정치가 여러 형태를 취한다는 것, 작업장에서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표현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스리랑카 항쟁만 봐도 거리 운동의 형태를 띠었다. 최근에는 파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봐도, 생계비 위기가 극심해질 때 거리 운동이 분출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공식 부문, 불안정 노동, 영세 자영업 등에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규모 거리 운동은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만만찮은 임금 투쟁이 성장한다고 해도, 또는 그런 투쟁이 성장하는 징후를 포착한다고 해도 그 투쟁의 성공에 너무 취하지는 말자. 영국에서 사흘간의 전국적 철도 파업이 있었는데, 그 투쟁의 퇴적물은 분명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파업이 역사적 규모의 파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벌이는 집단적 행동이 사회를 바꿀 힘의 원천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우리의 현 위치와 과제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한 여러 동지들의 발언이 있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의 나라에서 생계비 문제로 대규모 파업 투쟁이 벌어져도 자신의 단체가 너무 주변화돼 있어서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남아공의 알란 동지가 남아공금속노조(NUMSA)의 꽤나 효과적이었던 임금 투쟁에 관해 발언했다. NUMSA는 대형 노조이고, 우리 ‘킵 레프트’ 동지



6월 19일 생계비 위기에 항의하는 영국 노동자들

들이 그 투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그런 운동은 좀 더 일반적으로 정치 지형을 형성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 동지들이 생계비 방어 쟁점으로 파업 행동을 건설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쟁점에서 노동자 투쟁이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조직 노동계급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동지가 발언 중에 1960년대 후반에 [국제사회주의 경향 창시자] 토니 클리프가 콜린 바커와 공저한 소득 정책에 관한 소책자를 거론한 것은 흥미로웠다. 인플레이션의 특별한 점은 경제와 정치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면 그들은 전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게 된다. 물론 이는 비교적 드문 일이다.

여러 동지들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상황이 새롭다는 것은 위기의 규모나 투쟁의 잠재력이라는 점에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혁명적 정치를 건설할 잠재력이라는 점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그렇다. 우리는 21세기의 이 조건에서 혁명적 운동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그런 시도를 조금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마틴 엠슨의 새 책 《사회주의냐 야만이나》가 출간됐는데, 그 책에서 엠슨은 우리가 토론한 것 같은 위기의 조건에서 혁명의 의미가 무엇일지에 관해 주장한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다. 상황과 역량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 영향력을 늘리고 어쩌면 더 큰 운동을 건설할 수도 있는 기회다. 하나의 경향으로서 우리는 첨예한 조건하에서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응할 정치적 도구(혁명적 조직)가 있다.

번역 김준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 알기 쉬운 요점 자본론》의 저자인 **조셉 추나라**가 7월 2일 런던대학교에서 했던 강연과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함께 발제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의 강연과 정리 발언은 온라인 기사로 볼 수 있다.

경제학의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성격이 지금처럼 노골적이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각계의 경제 관계자들의 말을 한 번 들어 보시죠.

영국 중앙은행 총재이자 50만 파운드 [약 8억 원] 넘는 연봉을 받는 앤드류 베일리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를 정말로 자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실로 계급의식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반응이 재밌습니다. 다음 글을 쓴 마틴 샌부는 딱히 급진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임금 인상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지 묻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나머지, 마진[원가와 판매가의 차이]이나 이윤의 방어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지는 묻지 않기 쉽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태도라고 본다. 자기도 모르게 특정 경제 계급에 유리한 해법이 나오도록 구도를 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적 계급이라는 개념은 매우 오랫동안 주류 경제학에서 퇴물 취급을 받았다.”

이런 글이 기업주들의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렸다니 아주 인상적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면 편집자] 크리스 자일스도 딱히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우리를 크게 한 방 먹이려는 것이 틀림없다. 영국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더 쪼들리고, 소비를 줄이고, 임금 올려 달라는 얘기를 꺼내기 무섭게 하려 한다.”

재미있는 발언은 더 있습니다. 제러미 러드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그야말로 주류 중의 주류인 인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위해 연구 보고서를 씁니다. 그가 쓴 보고서에서 저는 다음 대목을 특히 좋아합니다.

“주류 경제학에는 ‘모두들 당연하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난센스

에 불과한 생각들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에 근거해서 실제 경제 현상에 관한 견해를 체계화한다… 이런 상황이 해롭거나 위협하지는 않을까?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는 미심쩍은 생각들에 따라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면 어떡하나 하고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바로 그런 일이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방금 인용한 보고서의 각주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주류 경제학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주된 구실이 범죄적으로 억압적이고 지속불가능하고 불의한 사회 질서를 변호하는 것이라는 더 심각한 우려는 다루지 않겠다.”

이렇듯 지금 경제학은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은 현 상황에서 10퍼센트 이하의 임금 인상률은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철도 노동자 등이 파업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 설명 못 하는 주류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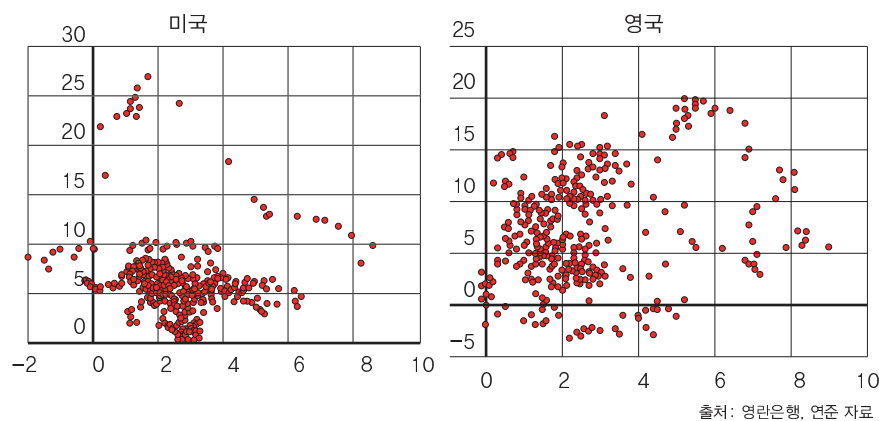
오늘 저는 인플레이션 위기의 맥락,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배계급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청중석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지금처럼 가파른 물가상승률이 살면서 처음일 것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은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실 테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처음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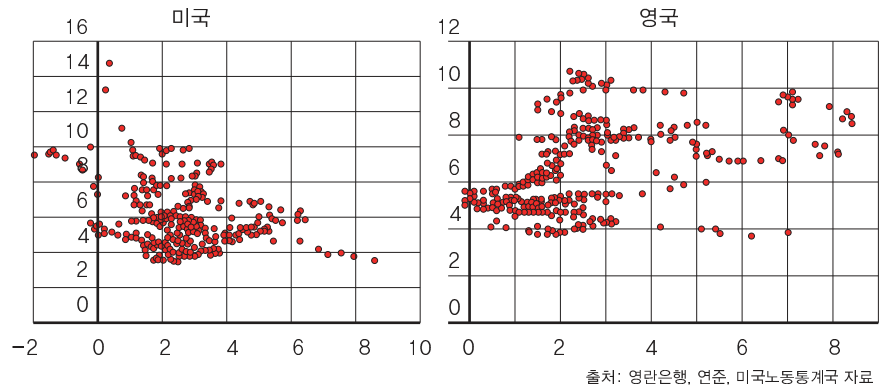
“영국이나 미국”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개발도상국과 빈국에서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등지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촉발한 핵심 계기 하나는 식료품 등의 물가가 크게 올라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면 아주 격렬한 노동자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몹시 중요합니다. 영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은 오랫동안 남의 나라 얘기였죠.

지금 보이는 것은 미국과 영국과 유

자료1. 광의의 화폐 공급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1989년 1월~2022년 4월(단위 %)



자료2.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1989년 1월~2022년 3월(단위 %)



로존 물가상승률의 장기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그래프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1989년 1월 이래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적은 세 지역 모두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설명할 이론이 주류 경제학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화주의 교리로, 화폐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케인스주의의 천박한 변형으로, 경제가 ‘필립스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즉 물가와 실업률은 길항 관계여서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인상률이 높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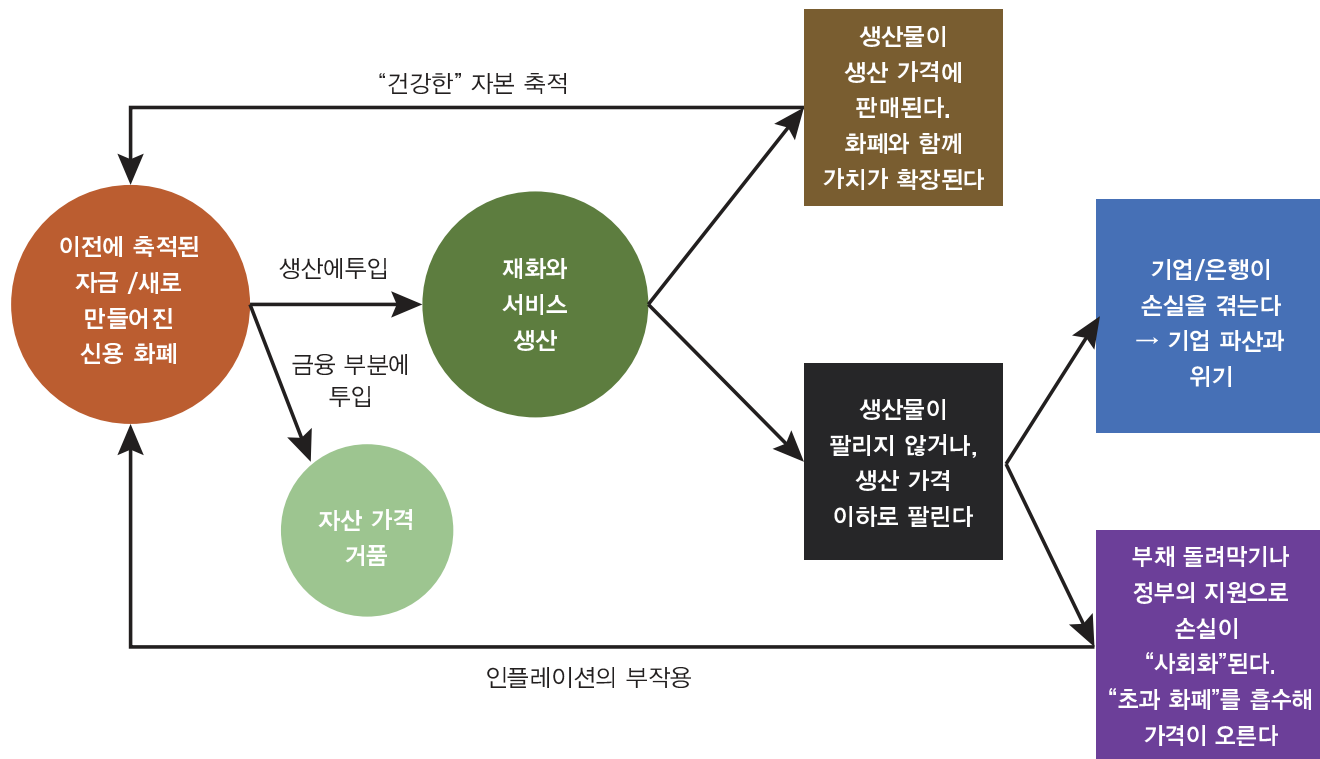
지금 보시는 그래프[자료1]는 해마다 광의의 화폐[현금이나 결제성 예금 외에도 저축, 시장형 금융상품, 채권까지 포괄한다] 공급량 증감률에 물가상승률을 대응시킨 것입니다.

통화주의가 옳다면 이 그래프의 점들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

는 대각선 모양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점들의 분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습니다. 통화주의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과 영국의 수치만을 제시했지만 다른 어느 나라를 조사해 봐도 역시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화주의의 현주소입니다.

다음은 현실의 ‘필립스 곡선’입니다.[자료2] 이론대로라면 점들이 매끄러운 L자형 곡선을 뚜렷하게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 자료에서는 그런 패턴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자료는 양 극단으로 튀어나온 점들 때문에 언뜻 그런 패턴에 부합하는 듯하지만, 이 점들은 사실 팬데믹 동안의 예외적 현상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낮은 시기에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급등했고, 고실업이 끝난 후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물가가 치솟았죠. 즉, 이 점들은 어떤 패턴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래프의 중심을 보면 ‘필립스 곡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3.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초과 화폐” 인플레이션



출처: A. Saad-Filho, *The Value of Marx* (Routledge, 2002), pp102-105
J. Choonara, "The Gathering Storm", *International Socialism* 175.

를 통해 막대한 화폐를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나요? 금융 자산의 가격은 올랐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물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자산 거품은, 오늘날 목도하는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규명하려면 뭔가 추가적인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더 나아가 특정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추동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볼 수 있는 요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하듯이, 자본이 더 집중돼 있고 독점이 형성된 부문일수록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 부문일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여지가 더 많을 테니까요. 또한 정부가 수요를 떠받치려고 개입을 크게 늘리는 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 전반의 이윤율과 자본 축적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와르 샤이크가 1980~1990년대에 시작한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현재 그는 “고전적” 경제학자를 표방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했습니다.)

이 그림[자료4]으로 샤이크는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잘 보여 줍니다. 그것은 축적률이 높지만(기업들의 투자율이 아주 높음) 이윤율은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일수록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의욕은 많지만(그래서 수요가 커집니다) 정작 투자할 만한 범위는 적습니다(이윤율이 낮으니깐요). 샤이크는 이런 긴장을 측정하려고 “성장 활용 비율”이라는 지표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윤율에 대한 축적률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보면,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그토록 심했던 이유를 일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전후 장기 호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형성된 높은 축적률이 1970년대의 위기와 이윤율 급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인플레이션을 추동하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설명: 낮은 이윤율, 높은 축적률

이렇듯 주류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보다 잘해야겠죠.

공정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도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저나 여기 있는 마이클 로버츠, 그리고 다른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런 이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통찰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제 시돼 왔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복합적인 수준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현상인 만큼, 복잡한 현상이고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매우 장기적인 수준에서 자본주의가 갈수록 생태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생산 비용은 순전히 마르크스주의적인 가치 면에서 더 비싸질 것입니다.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자본에 가해지는 생태적 압력이 커지면 이것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훨씬 급속하

게 일으키는 과정은 이런 과정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화폐의 구실을 설명에 도입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가치와 화폐가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가치와 화폐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화폐는 가치를 청구할 권리죠. 한편,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기업들에 의해 어떻게 가치가 생성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자본 축적 과정을 통해 갈수록 더 많은 가치를 축적하려 하죠. 그리고 이런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보면 주류 경제학 이론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개념도이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자료3] 이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산업 자본 순환에 화폐를 투입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매우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화폐는 은행 등의 민간 기관이나 정부에 의해 신용 화폐나 불환 화폐 형태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화폐가 생산과 축적 과정으로 흘

러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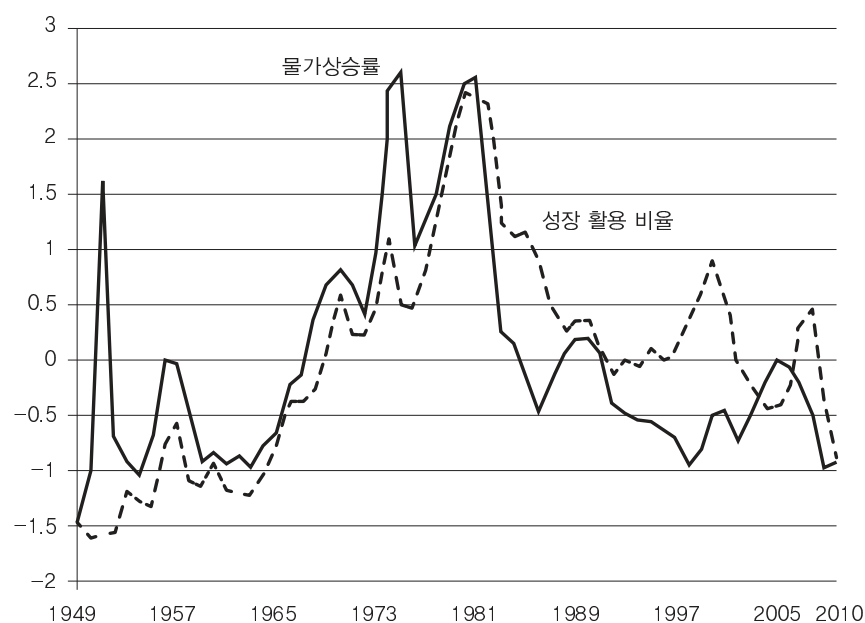
그림의 상단은 축적 과정이 건강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화폐가 생성되고, 이윤 획득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그럼으로써 자본이 확대되면 화폐가 생성된 만큼 가치가 생성돼 균형을 이룹니다.

그림의 하단은 이런 순환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검은색 박스는 어떤 이유에서든 상품을 생산 비용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체제의 원래 논리대로라면 잘못된 선택을 한 기업과 은행이 파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있는데, [구제금융 등으로] 부채를 부채로 돌려막거나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실이 사회화된 상황에서 다음 화폐 생성 주기와 생산 주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 결과 [같은 화폐로 청구할 수 있는 가치의 양이 줄어들으로써]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설명이 통화주의와는 다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2008년 이후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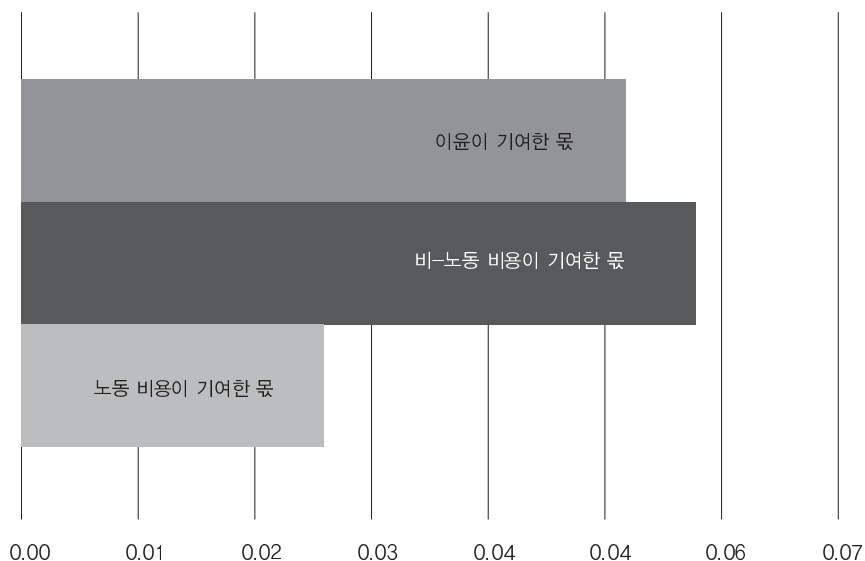
자료4. 미국, 인플레이션과 “성장 활용 비율”(이윤율에 대한 축적률의 비율)의 관계



출처: A Shaikh, Capitalism(2016년 10월), p711

자료5. 총부가가치 단위당 가격 상승에 기여한 몫(미국, 비금융부문)

2020년 2분기~2022년 1분기



출처: BEA, NIPA data table 1.15

오늘날의 인플레이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윤 확대

오늘날은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이윤율은 아주 오랫동안 자본주의 전반에 걸쳐 저조했고, 축적률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됐습니다. 축적률이 이윤율만 큼이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본주의가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분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팬데믹 자체는 전혀 끝나지 않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가 풀리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취한 대응을 봐야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치솟는 것은, 그간 봉쇄 조치로 누적됐던 수요가 공급 사슬 교란, 노동시장 교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생긴 온갖 차질들에 부딪힌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 특히 2021년 하반기에 봉쇄 조치들이 종료됨에 따라 투자가 늘었을 때, 단기적 물가 상승과 위기가 닥칠 것은 익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앞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둘 다 매우 중요한 식량 생산국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식량 공급에 중요한 나라들이죠.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의 빵' 등지에서는 현재 수백만, 수천만 명이 전쟁의 결과로 기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에서도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함께 세계적 수준에서 지배적인 에너지 수출국이 되고자 분투하는 3대 산유국의 하나죠. 이런 점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여기에 투기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가격이 치솟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투기판이 벌어져 가격 상승을 더 심화시키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연적 요인들만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전부였다면 인플레이션은 아주 빠르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대처하는 방식 탓에 더 확대되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격 인상이 임금 인상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거론하는데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탓에 노동자들에게서 자본가들에게로 가치가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료5]은 이윤, 비노동비용(원자재, 소재 등 생산 단계에서 쓰이는 것들), 노동비용이 각각 물가 상승에 기여한 몫을 계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들이 비슷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의 최신 통계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합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임금보다는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가격, 마진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는 이윤에 의해 추동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와 계급 문제로 돌아가게 되죠.

특히, 에너지 기업들의 이윤은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의 이윤이 얼마나 치솟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만, 에너지 기업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 전반으로 마진 늘리기가 확대되고 있고, 모든 주요 자본주의 기업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발제를 마치기 전에 지배계급의 대응에 관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해결책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신자유주의 시기를 지배한 교리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며, 그 방법은 통화 공급을 옥죄고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지배계급에게 두 가지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국제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국민 경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 만큼, 중앙은행에 관한 신화를 받아들이더라도 금리 인상이 어떻게 물가를 잡을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경착륙하고 경기가 빠르게 추락해, 그것의 효과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훨씬 큼니다. 다시 말해, 저들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는 취한 조치로 우리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더 일반적인 논점으로, 그런 시도가 불황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죠.

이 그래프는 미국 연준, 영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그래프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국면의 자본주의는 저금리에 중독돼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신용의 확대를 촉진하고 이것이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경제를 추동해 왔습니다. 일종의 체제의 생명유지 장치인 셈입니다.

그 결과, 가계 부채도 물론 심각하지만 기업 부채가 특히 심각합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말 금리가 크게 올랐을 때 라틴아메리카와 제3세계에서 부채[외채]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부채 위기는 특정 경제 부문이나 몇몇 나라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 부채 위기가 닥칠 수 있고, 그 결과는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을 혹독하게 강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로, 일생일대의 싸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녹취·번역 김종환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강동훈

이 글은 7월 14일 노동자 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QR코드로 영상 보기)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의 발표문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의미심장한 행보였다.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과의 밀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이 미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청와대 경제수석 최상목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 가고 있다”며 중국 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그동안 한국이 추구해 온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폐기하고 ‘안미경미’(安美經美, ‘안보도, 경제도 미국’)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방향 전환에 나선 까닭과 그 앞에 놓인 정치적·경제적 난관과 모순을 살펴본다. 그 전에 우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의미를 살펴보자.

‘4차 산업혁명’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사물인터넷(IoT), 5세대·6세대 이동통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의료 등의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디지털화에서 반도체는 핵심 부품이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도 있지만, 손전등이나 충전기 등 간단한 제품에도 반도체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를 ‘산업의 쌀’로 비유하기도 한다. 단 1~2달러 하는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 수백만 대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일은 반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이재용과 만난 바이든 중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대만·미국·일본 기업들도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동맹 앞에는 여러 난관과 모순이 놓여 있다

도체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 줬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는 6000억 달러 수준이지만, 반도체가 영향을 끼치는 산업 부문을 따지면 세계 GDP의 40퍼센트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자.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설비 기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IT 산업 등에서 ‘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다른 국가와 기업들이 이를 따르게 할 힘이 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 부문은 대만과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위탁제조(파운드리) 부문은 대만 TSMC가, 반도체 시장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유럽·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했다.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은 1990년 전 세계 생산량의 37퍼센트에서 2020년 12퍼센트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대만 등 아시아 지역이

반도체의 70퍼센트를 생산한다. 특히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는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밖에 없다. 10나노 이하, 즉 선풍이 좁은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은 고성능 반도체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반도체나 부품을 수입해, 조립·판매하며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켰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이다. 2020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500억 달러(약 457조 원)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3퍼센트나 차지했다. 원유와 전체 농산물 수입액보다도 많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단순 조립 생산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제조2025’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해, 단순 조립 생산은 그만두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고급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까지 자급률 40퍼센트, 2025년까지 7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관련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를 엄청난 위협

으로 여긴다.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FANG 같은)이 장악하고 있는 고수익 산업 부문의 지배력이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 : 중국 첨단산업 죽이기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방해했다. 트럼프는 2020년에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인 화웨이에 제재 조치를 시행했고, 중국이 네덜란드 ASML사의 반도체 첨단 제조 장비(미국이 핵심 기술 개발국이다)를 수입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꽤 사기도 했지만,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내의 ‘초당적 합의’가 있다.

미국의 기술 제재 때문에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발전시키려던 중국의 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방해로 수입하지 못한 ASML의 첨단 제조 장비를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중국의 2020년 반도체 자급률은 계획했던 목표인 40퍼센트에 훨씬 못 미친 16퍼센트 수준에 그쳤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몇몇 기업들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해 파산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이나 대만보다 2~3세대 뒤진 생산 설비를 수입해 저사양 반도체가 필요한 부문에서 반도체 국산화를 진척시키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바이든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육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계승했고, 이에 더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해 미국 내의 반도체 생산을 증대시키는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동맹들을 더 확실하게 미국에 묶어 뒀 반도체 분야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과 함께, 향후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에너지·곡물 등의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은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강화시켰다.

예컨대 구글 전 회장 에릭 슈미트는 언론 기고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 TSMC의 제조 시설들이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미국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바이든 정부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약 430억 유로를 지원해 유럽연합 내의 반도체 생산량을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10퍼센트 수준에서 20퍼센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도 대만 TSMC를 끌어들이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처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늘리며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몰아내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과 맺고 있는 경제적 관계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를 완전히 규제하면 중국 IT 산업이 무너지겠지만, 그와 동시에 애플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유럽·일본·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이 중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도 미국이 제재를 더 강화하기 어렵게 한다. 바이든 정부의 기술 규제가 한창인 2021년에도 한·미·일 기업들은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141억 4200만 달러어치나 수출했다. 이는 2020년보다 55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

미국에 협조하는 윤석열 정부

분명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더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한국은 미국과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25퍼센트나 되고,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60퍼센트가 중국(홍콩 포함)으로 향하며, 중



바이든 방한 4일 전인 5월 16일,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에서 반도체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국에 70퍼센트 이상 의존하는 원재료·공산품이 700여 개나 되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며 말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중국 시장을 가벼이 여기고 ‘안미경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는 것은 다소 단순한 관측이다. 한국 기업들의 행보도 ‘미국에 줄서기’를 확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바이든 방한 후에 미국에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 초에는 중국 반도체 공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중국 생산을 늘렸다. SK하이닉스는 바이든 방한 4일 전인 5월 16일에 중국 다롄에서 반도체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정책에 협조하는 쪽으로 더 기울 것은 사실인데, 이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인 듯하다. 둘 다 그저 미국을 추종해서가 아니라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첫째, 한국의 지배계급 상당수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기회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잠식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나 한국이 한동안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술 우위만 유지된다면 중국의 높은 한국 의존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둘째,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은 새로운 첨단 산업 시장을 확보하려면 미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확고하게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로 확장하고 싶어

한다. 바로 이 분야가 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를 넘어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만이 장악한 시장을 잠식하려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 내야 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국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도 확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반도체 동맹, 순항할까?

그러나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 앞에는 적잖은 난관이 놓여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에 협조하는 것은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부분적으로 분리돼 있던 냉전 시절과는 다르다. 설사 미·중 간 경쟁 격화가 당장은 지정학적 충돌(예를 들어 대만을 둘러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해도, 갈등 증대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 편을 더 확실하게 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키울 것이다.

이런 압력이 높아질수록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희망은 일장춘몽이 되기 쉽고, 한국 지배자들 내에서 해법을 두고 갈등이 심각해지며 정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한국·대만·미국의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바이든 정부가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반도체 동맹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920억 달러(약 120조 원)의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보다 73퍼센트나 증가한 수치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 이런 ‘과잉투자’의 손실을 누가 더 져야 할지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셋째,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 측의 문제도 있다. 우선, 바이든 정부가 520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8월 초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미국 공화당은 이 법안 처리에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에는 굳이 재정을 지출해 가며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외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 8월 초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공급망 재편 계획이 중지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IPEF도 참여국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의 뜻대로 대중국 견제에 힘을 모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시장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거리를 좁힐 수도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중국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어렵다는 점은 현 세계 질서가 단순히 ‘신냉전’으로 재편되고 있지

▶ 13면으로 이어짐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은 알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장혜영 의원은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어 유가 부담을 낮출 수는 있”다며 타협의 여지는 열어 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주된 근거는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묘한 논리다. 모름지기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같은 간접세가 역진적이라고 간주돼 왔기 때문이다.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더 크다. 유류세 같은 간접세를 줄이는 게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장혜영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들은 기름값이 올라 저소득층이 석유 소비를 더 많이 줄이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석유 소비를 줄이지 않은 부유층이 더 혜택을 본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고유가 때문에 저소득층이 소비를 더 많이 줄인다는 주장이야말로 역진적인 유류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임을 보여 준다.

뒤집어 보면 이는 유류세 인하 효과도 저소득층에게 더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유류세 감면 혜택은 절대 액수로 따지면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유류세 경감액을 소득 내 비중으로 따지면 소득 하위 10퍼센트가 상위 10퍼센트의 3배로 나타났다.

▶ 12면에서 이어짐

않음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미·중 갈등에 일조하는 것이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 탄력근로를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무시하면,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다

기묘한

정의당은 유류세 인하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은 마땅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고소득층”에는 노동자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흔히 소득 상위 20퍼센트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위 20퍼센트는 연봉 5600만 원, 월급 실수령액 370만 원이다. 상위 10퍼센트도 연봉 7800만 원이다. 즉, 정의당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유류세를 내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사회연대전략의 발상이다. 사회연대전략은 자본가 계급이 저야 할 일부 책임을 일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노선이다.

정의당의 견해에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노동자들도 (석유) 소비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노동자들도 기후 위기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도 반대

하지 않는다.

요컨대 정의당의 구상은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모두 희생과 나눔에 동참해야 불평등을 줄이고 탈탄소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회 변화의 진정한 동력인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물론 정의당은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상당수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투쟁은 노조 지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신들은 더 넓은 ‘국민적 시야’ 속에서 활동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을 개별 유권자나 납세자로 보는 관점이 갈수록 강화되고, 계급적 관점은 갈수록 흐려진다. 게다가 정의당의 활동이 의회에서의 입법에 초점을 두게 됨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노동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기껏해야) 모순된 신호를 주는 셈이 됐다. 예컨대, 기름값 인상에 맞선 임금 인상 투쟁을 지지하더라도 유류세는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도 양보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위기가 커질수록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계급투쟁의 전진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지 않은 정의당의 노선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정의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하려 해도 투쟁이 고양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성적이 좋았는데, 이는 박근혜 퇴진 투쟁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덕분이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 해도 거대한 운동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윤을 지키려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이 생활수준의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한 책임 전가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어떤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생산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부당한 책임 전가는 노동자들이 기후 운동과 거리를 두게 할 뿐이다.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대변하려 애쓰지 않을수록 노동자들 내에서 자신의 지지를 갉아먹는 것은 자연스럽다. 얼마 전 대우조선사내하청 파업 연대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서 장혜영 의원은 “노동이 정의당을 버렸어도 정의당은 노동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노동은 정의당을 버리지 않았다. 정의당이 진정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노동을 향한 자신들의 정치다.

안타깝게도 좌파에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곳이 정의당만은 아니다. 진보당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한다. 노동당은 유류세에 관한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좌파의 약점을 우파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윤석열은 대선에서 전기요금 인상 반대 공약을 내어 호응을 얻었다.(물론 당선 뒤 급세 어겼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를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한다. 좌파 정당들이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외면해서 좋을 일이 없다.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분노하며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의 전진을 추구하려는 정치가 성장해야 한다.

정선영

확대해 노동자들을 더 싸게 마음대로 부려 먹으려 하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며,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

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 정권 시절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국익’의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현재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방어하는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workerssolidarity.org/join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베 암살 이후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올가을 임시국회부터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의 유지를 이어받아, 75년간 유지돼 온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은 9조 수정이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에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포기가 명시돼 있다. 집권 자민당은 이를 고쳐서 우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분명히 밝히려 한다.

일본 자민당의 희망대로 헌법 9조가 수정되면, 그만큼 일본 제국주의는 군비 증강과 공세적인 군사 전략을 추진하는 데서 운신의 폭을 상당히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압하려는 미국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 총리 아베 신조 암살 직후에 진행됐다. 아베는 선거 유세 중 사제 총으로 무장한 한 청년에게 피격돼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여당의 선거 승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개헌선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개헌선

아베 암살이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화제가 됐지만, 그에 대한 추모와 연민으로 일본 대중이 모

두 단결한 것은 아니었다. 아베는 전후 최장기 총리를 지내면서, 수도 민영화 등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그의 재임 기간에 임금 인상이 정체된 채 노동자들은 더 오래 일하도록 내몰렸다. 아베 재임 중인 2017년 한 조사를 보면, 일본 기업의 25퍼센트가 한 달에 80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고 아베가 팬데믹에 엉망진창으로 대처하면서, 그의 지지율은 추락했다. 결국 아베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 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아베는 일본 우파의 핵심 지도자로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려고 앞장선 인사였다.

2014년 총리로서 그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을 도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일본·인도·호주를 묶어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지키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주창한 자도 바로 아베였다.

총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아베의 우경화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대만 문제는 일본 자신의 문제라면서 개입할 것을 강조했다. 자민당이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데에도 아베가 큰 영향을 미쳤다.

▶ 15면으로 이어짐



기시다 내각은 얼마전 피습 사망한 아베의 대외 정책을 계승해 왔다

사진 출처: 일본 총리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4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0

▶ 14면에서 이어짐

방위비 2배

일본 기시다 내각은 본질적으로 아베의 대외 정책을 계승해 왔다.

일본 지배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정학적·경제적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일본 제국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그래서 아베를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산업 재부흥', 군비 증강, 개헌 등 일본의 경제적·지정학적 위상 제고를 위한 변화를 모색했다. 이는 미국 제국주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었다.

다른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협력해, 이를 반도체 등 일본 첨단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 자민당이 개헌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는 듯하다. 이 전쟁이 미·중 갈등을 비롯한 아시아의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제재를 신속히 단행했고,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군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 정치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7년부터 중국 견제를 위한 대규모 '인도·태평양 파견(DP) 훈련'을 해 왔다

는 사할린 가스관 사업에서 일본 기업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본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본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2.5배 늘었다고 밝혔다.

기시다와 집권 자민당은 단기간에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퍼센트에서 2퍼센트대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러면 이미 세계 9위인 일본의 군비 지출이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일본의 개헌 추진과 군비 증강은 특히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이런 행보는 미래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본 대중이 이런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아사

히 신문>이 매년 개헌 찬반 여론조사를 해 왔는데, 2000년 이래 그 추세를 보면 찬반 여론이 엇치락뒤치락해 왔다.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본에서 개헌 지지가 늘었다고 하지만, 지난 5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했다.

자민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개헌 논의에는 찬성하나 9조 개정에는 주저하는 공명당부터 설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국민투표가 있다. 자민당의 개헌 시도가 성공하려면 앞으로 여러 고비를 넘겨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2퍼센트로, 역대 4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공식 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일본 공식 정

치의 우경화가 곧 일본 대중의 우경화는 아닌 것이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2000년 460만 엔에서 2020년 433만 엔으로 줄어들었다. 그중 1년에 200만 엔(약 1900만 원) 이하를 버는 노동자는 전체의 22퍼센트가 넘는다.

최근 물가 인상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중의 삶에도 큰 압박이 되고 있다. 평범한 일본인들은 생계비 문제로 큰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막대한 군비 증강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은 일본 대중의 생계비 위기 해결 바람과는 어긋난다. 일본 우파의 계획이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힐 여지가 있는 것이다.

김영익

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밀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겠다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라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민간 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87.6퍼센트(인사혁신처)로 격차가 상당하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이 크게 개악돼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철밥통인데 밥통에 밥이 없다”면서 불만이 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내년 공무원 보수 7.4퍼센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7월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는 1.7~2.9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해 노조 측의 항의 속에서 위원회가 산회되기도 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한다. 임기 말까지 정부 부처

정원의 5퍼센트를 감축·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각종 재난 상황 등에 시달리고 있어 오히려 인력 충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 순직한 공무원이 341명이나 되고 그중 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람만 113명에 이른다.(용혜인 의원실)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은 입직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하고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낮아진 이유일 것이다.

윤석열은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할 것처

럼 얘기한다. 그러나 코로나19나 각종 재해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과 보건의료 노동자 충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낮은 임금 인상은 사회 전반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노동자·서민의 허리띠만 졸라매게 할 뿐이다.

물가 인상 속에서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인력 감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되지 않도록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야 한다.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탈북 어민 강제 복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복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한 양 목 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 커녕 제3국에 수용소를 지어 수용하려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탈북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고, 윤석열은 바로 이 조작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미얀마인들의 입국을 거부해 강제송환 위험에 내몰기도 했다. 이들은 난민 지원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입국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무부 앞에서는 강제송환의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 난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파는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고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강제 복송 쟁점을 이용할 뿐이다. 우파가 국제법상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운운하는 것이 위선인 이유다.

당사자 의사는 무시

그러나 우파의 공세가 위선적이라고 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북 어민들을 강제 복송한 것은 잔혹한 짓이다. 그들에게는 원칙상 난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복송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거슬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팩트다(민주당의 일부는 이를 흐리지만).

사건 직후였던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 김연철도 이들이 자필 진술서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남한 경비정에 나포된 이후로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어 복송된다는 사실조차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7월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복송 영상을 보면, 탈북 어민 한 명은 판문점의 분계선 앞에서야 복송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저앉아 저항한다. (포승줄에 묶여 눈이 가린 채 호송됐다.)

혐의만으로 추방

민주당은 복송을 정당화하려고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라고 주장한다. 도피 목적의 귀순이므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살인범을 추방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난민을 선별하는 논리다. 그러나 범죄 혐의만으로 탈북민을 추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탈북민과 난민은 더욱 취약하고 억압받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난민 중 잠재적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각국 정부가 난민을 배척하는 핵심 논리의 하나로 이용해 왔다. 정부는 위험인물을 선별해야 한다며 자의적으로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별 근거도 없이 감옥 같은 보호소에 갇히거나 공항에 억류당하기도 한다. ‘국민의 안전’ 운운하지만, 실은 난민 배척이 목적인 것이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외국인이 아닌 국민으로 규정되므로 난민의 강제 송환 금지가 적용될 수 없다고도 하지만, 현실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절차는 (어느 정권하에서도) 이들을 간첩이나 위험인물로 일단 전제하고 전개된다.

탈북민은 남한에 오자마자 국가정보원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반드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기관의 원래 이름은 중앙합동신문센터였다. 이곳에서 탈북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의 합동 조사를 받는다.

간첩으로 조작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바로 이곳에서 반년이나 구금돼 협박과 가혹



강제 복송되는 탈북 어민. 그는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복송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행위에 시달리다 허위자백을 한 후 추방당했다. 자백은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탈북 어민 복송 사건에서도 국정원 조사에서의 자백을 주요 근거로 탈북 어민들을 범죄자로 단정했다.

재판청구권

다른 증거 등을 통해 탈북 어민들이 범죄자로 의심됐더라도 복송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식 재판에서 다뤄야 했다. 설령 범죄 사실이 있다 해도 자기 방어에 불리하지 않을 곳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는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매우 억압적인 북한에서는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더 어렵다고 보고 귀순을 신청한 것일 수 있다.)

민주당은 범행이 북한에서 벌어져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며, 끊임없이 범죄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다. 흉악범이 무죄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할 거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판을 하지 않고 정부가 범죄 사실을 확정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되는 주장인가? 범행이 이뤄졌다고 하는 선박 자체는 남한이 나포해 확보한 상태였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수사 협조 요청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범죄자는 교화될 가능성도 없고 사회로 나오면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보수적 편견을 키울 뿐이다. 그러나 사법 절차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알면, 그런 편견이 얼마나 부당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복송한 이유가 남북 관계를 고려한 것이든, 다른 난민을 배척하듯이 대응한 것이든, 이번 사건은 민주당 세력이 그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탈북민을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비난하는 우파도 탈북민을 장기판의 말로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탈북민이 남한에 남을지 북한에 돌아갈지 혹은 제3국으로 떠날지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탈북민과 난민에게 큰 고통을 낳는 국경 통제는 사라져야 한다.